NB-2026-106 · 보험·연금 · 발행 2026-11-01 · 자료 기준일 2026-11-01 · 연번 2026_106 · 읽는 시간 6분 · 작성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계획은 2028~2030년으로 나뉩니다

체불액 중 퇴직금41.1%와 사업장 규모별 도입 일정, 새 근속분 적용의 한계를 읽습니다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퇴직급여 재원을 회사 밖에 두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발표된 연도, 법률 개정의 조건과 적용할 근속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연구소의 판단

연구소는 사외적립의 시작일뿐 아니라 어느 근속기간의 급여를 밖에 쌓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봅니다. 작은 사업장은 계획상 도입 시점이 늦고, 각 단계 이후 발생하는 근속분부터 의무가 적용됩니다. 사외적립과 안전한 운용은 별도의 보호 장치이므로 기금형 도입을 체불·손실 위험의 일괄 해소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01 · 확정된 사실

금융위원회가 2026년 10월30일 게재한 관계부처 합동 방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11월 중 마련하고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고 설명합니다.

항목	확인된 내용	비고
현재 단계	노사정 합의에 따른 법 개정 추진	확정 시행일 아님
퇴직금 체불	2025년8,229억원·체불액의41.1%	발표문 기준
1단계	2028년100인 이상 사업장	연내 법 개정 조건
2·3단계	2029년10~99인, 2030년10인 미만	규모별 순차 도입 계획
적용 근속분	각 단계 시행 시점 이후 발생분	기존 근속분과 구분
정부안 지원	적립금 매칭60억원·융자비용 보전62억원	2027년 자율 우선 도입 지원

방안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1,500개소의 실태조사와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마련됐습니다. 연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준비기간1년을 두는 구상입니다. 발표문에 적힌 연도는 국회 입법과 이후 준비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는 조건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사외적립은 급여 재원을 회사 밖 금융기관 등에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는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을, 제8조는 퇴직금제도를, 제16조는 확정급여형의 지급능력 확보를 각각 다룹니다. 현재의 퇴직금 지급의무와 앞으로 추진할 전면 사외적립 의무는 같은 규정이 아닙니다.

02 · 왜 이런 구조인가

회사가 퇴직금을 나중에 직접 지급하는 구조에서는 근로자의 퇴직 시점에 회사의 지급능력이 중요합니다. 퇴직연금은 재원을 외부에 적립해 두지만 급여 산정과 운용손실 부담은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에 따라 다릅니다. 이름에 퇴직연금이 붙었다는 사실만으로 적립 수준이나 운용 결과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방안의 순서는 법 개정, 준비기간, 규모별 적용입니다. 100인 이상 사업장이 먼저 시작하고 작은 사업장이 뒤를 따릅니다. 각 단계 시행 이후 근속분에 적립 의무를 붙이므로 동일 근로자의 퇴직급여에도 적용 시점 전후의 재원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기금형은 수탁법인이라는 별도 주체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방안은 가입자 이익 우선, 손해배상 책임, 운영위험준비금과 자산보관·기준가 산출의 외부 위탁 등을 제시합니다. 회사 밖으로 돈을 옮기는 것과 그 돈을 맡은 주체를 통제하는 것이 서로 다른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수탁법인의 인가·감독 내용도 최종 법률로 확인해야 합니다.

03 ·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직접 영향을 받는 사람은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입니다. 계획상 100인 이상과10인 미만 사업장의 시작 연도는2년 차이입니다. 사업장 규모를 확인하지 않은 채 '2028년부터 전면 시행'이라고 이해하면 자신의 적용 시점을 앞당겨 받아들이게 됩니다.

2025년 퇴직금 체불8,229억원과41.1%는 이미 발생한 체불의 구성입니다. 이 비율만으로 모든 체불의 원인이 사내적립이었다거나 앞으로 같은 금액이 사외적립으로 예방된다고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발표에는 사업장 규모별 체불액과 기존 근속분의 미적립 규모가 함께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2027년 정부안의60억원과62억원은 자율적으로 먼저 도입하는 사업장을 지원할 예산입니다. 이를 더하면 122억원이지만, 연간 체불액과 지원 대상·목적이 달라 체불 보전률로 환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개인에게 지급될 지원금이나 확정된 사업장별 수혜액으로도 읽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알아보기 어려운 부분은 적립 대상 근속기간과 실제 적립 수준입니다. 퇴직급여 예상액을 안내받았더라도 전액이 외부에 적립돼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회사가 적용하는 제도, 개인별 납입내역 또는 DB 적립 관련 안내를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04 ·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시행 전 근속분이 자동으로 밖에 적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표는 각 단계 이후 발생하는 계속근로기간을 대상으로 설명합니다. 기존 근속분의 처리와 과거 적립 부족분의 전환 방식은 개정안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의무화 연도는 입법 완료와 구분해야 합니다

11월1일 현재 발표된 것은 연내 통과 추진 계획입니다. 확정 법률의 적용일·유예·예외가 나오기 전에 모든 사업장에 같은 의무가 이미 생겼다고 안내하면 안 됩니다.

사외적립 뒤에도 운용·관리 위험은 남습니다

기금형의 투자수익과 손실은 가입자에게 귀속되는 구상입니다. 수탁자 책임·분산투자·보관기관의 검증이 실제 어떤 의무로 정해지는지 살펴야 합니다.

05 · 지금 할 일

국민

• 인사·급여 담당 부서에 퇴직금·DB·DC 중 적용 제도와 근속기간별 처리 방식을 확인하고 안내문을 보관합니다.

• 퇴직연금 가입자는 금융회사의 납입·운용내역과 회사의 안내를 비교합니다. 발표된 의무화 연도만으로 본인 급여 전액이 이미 사외적립됐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상회사

• 사업장 규모와 기존 근속분을 구분한 도입 계획을 검토하고, 의무화 전에 자율 도입할 때의 실제 지원요건은 확정 사업 공고로 확인합니다.

• 예상 퇴직급여와 외부에 적립된 금액의 차이를 근로자에게 설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당국

• 법률안에 적용 시점 전후의 근속분 처리, 예외·유예, 의무 불이행의 효과를 분명히 적습니다.

• 사업장 규모별 체불·미도입·적립 부족 자료와 지원사업 집행 결과를 구분해 공개합니다.

갈림길

기존 근속분의 처리까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되는가

전면 사외적립 의무의 최종 시행일과 시행 전 근속분 처리 조항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A · 기간별 처리와 납입내역을 함께 알리는 경우

근로자는 자신의 퇴직급여 가운데 어떤 부분이 사외에 적립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도 필요한 자금 규모를 구분해 준비할 수 있습니다.

B · 도입 연도 위주로만 알리는 경우

제도 도입 사실과 급여 전액의 외부 적립이 혼동될 수 있습니다. 기존 근속분의 지급 위험과 적립 부족분을 뒤늦게 알게 될 수 있습니다.

확인 신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부칙의 적용례, 최종 국회 처리 결과, 고용노동부의 사업장별 안내와 지원 공고를 확인합니다.

함께 읽을 것

금융상품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금융상품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금융제도 · 퇴직연금제도

근거와 검증

01 · 1차 · 체불액 중 퇴직금8,229억원·41.1%,1,500개소 실태조사

금융위원회·관계부처「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 2026-10-30 · 추진 배경·사외적립 의무화 · 확인 2026-11-01

https://www.fsc.go.kr/no010101/88027

02 · 1차 · 2028~2030년 규모별 계획·법 개정 조건·미래 근속분 적용

금융위원회·관계부처 같은 발표 · 2026-10-30 · 퇴직급여 사외적립 · 확인 2026-11-01

https://www.fsc.go.kr/no010101/88027

03 · 1차 · 2027년 정부안60억원·62억원과 지원 대상

금융위원회·관계부처 같은 발표 · 2026-10-30 · 자율적 우선 도입 지원 · 확인 2026-11-01

https://www.fsc.go.kr/no010101/88027

04 · 1차 · 기금형 수탁자 책임·운영위험준비금·업무 위탁

금융위원회·관계부처 같은 발표 · 2026-10-30 · 기금형 도입 · 확인 2026-11-01

https://www.fsc.go.kr/no010101/88027

05 · 1차 · 현행 퇴직급여제도·퇴직금·DB 지급능력 확보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현행법 확인2026-11-01 · 제4조·제8조·제16조 · 확인 2026-11-01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06 · 파생 · 규모별 시작연도 차이2년·지원예산 합계122억원

2030-2028=2년.60+62=122억원. 발표문 입력값을 사용한 계산이며 체불 보전률이나 개인별 지원금이 아닙니다.

추적 예정

11월 중 발표 예정 법률안과 부칙, 연내 국회 처리 여부,2027년 지원사업 공고에서 적용 근속기간·예외·지원 대상을 재확인합니다.

정정 이력

2026년 11월1일 최초 게시. 정정 없음.

면책 고지

이 글은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의 분석과 견해이며, 감독기관이나 금융회사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특정 금융상품의 매매·가입·해지를 권유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정책의 추진 계획과 현재 시행 중인 규칙을 구분해 읽고, 실제 계약과 권리 행사에 앞서 최신 공식 문서와 개별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